잇단 학사비리 의혹에 '당혹 · 분노'

기숙사 휴일 자습시간에 '특정 문제지' 배포
행정실장→학운위원장 시험지 유출 10개월만에
3년 전 생활기록부 조작 결국 학생들만 피해
"성적 지상주의 병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종이(기숙사생들이 미리 받아본 문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 3학년 A군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페이스북 퍼온 글)의 일부다.

지난 5일 실시된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2문제 등 모두 5문제(총점수 26점)를 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특정 동아리에서 미리 풀어봤다는,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폭로성 글이었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 이 글은 삽시간에 SNS를 타고 퍼져나갔고, 언론보도와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 A군은 "서술형 6문제 가운데 3~4개 문장이 상식적으로 1~2등급 밑의 아이들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었다"며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드냐고 기숙사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종이 5장'을 보여줬고 그 종이에는 바로 시험에 나온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2문제가 있었다. 손이 떨리고 욕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숙사 친구들은 '일요일에 따로 하는 수학수업은 받았고 자습하고 있는데, 시험 출제자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 오셔서 갑자기 나눠줬다'고 했다"며 "우리반 기숙사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담임 선생에게 제기했더니, 돌아온 답은 '문제가 출제된 특정 모의고사를 돈을 주고 구입해서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기숙사는 공짜로 복사해 나눠주고 우린 알아서 찾아내서 풀어보라는 것은 차별과 무책임"이라고 분개해 했다.

이에 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모 사립고의 시험지 유출 악몽을 떠올리는 일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엄정조사를 주문했고, 교육청은 긴급 현장조사에 이어 감사반 2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 간 시험지와 답안지, 기숙사 학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모으고, 다른 과목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재직 교사가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 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장, 교감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고, 교육청 감사가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역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 불과 10개월만이다.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교육 당국이 수차례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인 지 1년도 안돼 터진 일이어서 시민들과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이 '악몽'으로 표현한 모 사립고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해 7월 6~10일 기말고사, 4월 25~27일 중간고사와 관련,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건에 연루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나란히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들을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 성적 향상에 혈안이 된 '의사 엄마'의 과욕과 시험지 원본을 복사한 소위 '시험 족보'를 대범하게 유출한 행정실장의 교육적 일탈이 빚어낸 비리였다.

앞서 2016년에는 고3 재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를 고의로 조작한 또 다른 사립고 교장과 교사 등 13명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현직 교사가 개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과 유사하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단순히 '명문대 진학생수'로 판단하거나 이를 승진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그릇된 인식은 결국 낙인효과에 따른 입시 낙마 등 상당수 학생들의 진학피해로 이어졌다.

성적 위주 교육방침이 심화반 편성과 교비 전용, 기숙사생만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 과외 교습, 금품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교육계 현실상 뿌리뽑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욱이 생기부 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은 '2등급 학생은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도 같은 것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8일 "시험지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학교는 몇 년 전 동아리 활동을 위장한 공휴일 기숙사반 특별수업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는 바로 그 학교"라며 "되풀이되는 학사비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처방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가스 가스 가스' 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달서구청 충무관에서 열린 2019년 여성예비군 작계기본훈련에서 여성예비군들이 방독면 착용법을 교육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문제 결혼 2년 사이 가장 많아…모니터링 필요"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8일 다문화가정 전문가는 "법 강화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초기 2년 사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경은 센터장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밑바닥에 있는 가정폭력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이 베트남, 중국 등 타국에 눈길을 돌리면서 내재돼 있던 문제가 이주여성에게 분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 광주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인구 149만6000여명 중 6158명으로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6296명으로 전남 인구 179만명 중 0.4%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중복 응답자 포함 이중 심한욕설 314명(81.1%),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신체폭력도 147명(38%)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 센터장은 "영암 사건의 경우도 함께 생활한 시기는 한달 남짓이며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도 타국가와 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혼인을 하기 앞서 상대 여성의 국가에 대한 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며 "인권교육을 비롯한 응급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은홍 기자

베트남 부인 상습폭행 30대 남편 구속

두 살 배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남편 A(3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발바닥을 3대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3~4차례 정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3년전 만났으며 B씨가 임신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던 부인 B씨는 A씨와 재결합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혼인신고했으며 영암에 거처가 마련되자 지난 5월17일부터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와 아이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A씨에게 맞지 않기 위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국말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또 지인은 B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SNS 등에 게시했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정환 기자

출하 앞 둔 전복 6000만원 상당 훔친 일당 검거

완도에서 출하를 앞둔 전복을 훔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8일 6400만원 상당의 전복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달여 동안 완도 약산면과 신지면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3~5년생 전복 6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은 방범이 허술하고 새벽 시간대는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해 수확을 앞둔 전복만 훔쳐 달아났다.

또 훔친 전복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양식장의 전복을 도난당했다는 어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전복을 구입한 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대구 초등학교 지하 변압기서 불

8일 오전 10시3분께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의 한 초등학교 지하 1층 변압기에서 불이 나 6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불은 학교 교사가 "수업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차단됐다"며 119에 신고했다.

불은 학교 관계자가 12분 만에 자체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연기에 놀란 초등생과 교직원 등 670여명은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지하실에 가득 찬 연기를 밖으로 배출했다.

그러나 변압기에서 불이 난 탓에 학교에는 정전이 이어졌다.

학교 측은 인근 초등학교의 도움을 받아 밥과 반찬 등의 급식을 배급했다.

학생들은 정전이 된 교실에서 이날 오후 2시40분까지 정상 수업을 했다.

학교유지보수업체는 변압기 점검과 수리공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감전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